

전남 국회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파격 지원책 선행돼야”

찬성 6·유보 2·반대 2...지역 장기발전 차원의 큰 그림 요구 부울경 결집 가덕도 신공항 사례 견취 대형 프로젝트 연계 필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이 불가피한 것이냐는 광주 국회의원들의 인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결집,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이전 후보지 기 초단체장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 전략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여야 정치권이 결집,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부산 엑스포 유치 등에 나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듯이 광주·전남 정치권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을 미래를 열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광주일보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에게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결과, 갈등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우선,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함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개호(영광·함평·담양·장성) 의원은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한 광주시와 국방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군 공항 이전이 광주시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기에 전남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역 최다선 의원답지 않은 소극적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이전 대상지로 거론되는 무안군이 지역구인 서삼석(무안·신안·영암) 의원도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과 시행방법, 소요 자원 및 조달 방안 등이 군 공항 이전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군사공항의 통폐합

도 검토돼야 하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정부가 책임지고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의 ‘소음’을 무안으로 이전하는데 확실히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김원이(목포), 김승남(고흥·보성·강진·장흥), 윤재갑(해남·진도·완도),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순리적이며 민간공항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도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군 공항의 전남 이전에 동의했다. 이들은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 대형 프로젝트 등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장,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

원 등이 공동 협의체 등을 구성, 군 공항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동부권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희재(여수·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은 군 공항의 전남 이전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면 이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충분한 협의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군 공항 이전이 전남 서부권 문제라는 방관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오광록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尹 방미, 첫단추부터 잘못...한국은 美 속국 아냐”

민주당 최고위...“美, 한국에 반도체 수출 통제 요구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한미 정상회담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해 미국 측도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다.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외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업에 수출하러 말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는 요즘 유행하는 걸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하게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해야 될 것”이라며 “어떤 동맹도 우리의 국익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생명인 반도체를 불공정한 차별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진영 대결의 허수아비, 전초기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마저 한일 정상회담처럼 퍼주기 그리고 굴욕 외교로

점철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공정한 윤 대통령의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한글본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의 주어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정부 기관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면서 “진상조사·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 역사 왜곡을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또 역사적 범죄행위를 용서할 권한까지 포함되느냐 문제”라면서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형배, 1년만에 민주당 복당

당 요구 따른 ‘특별 복당’...의석수 171석으로 늘어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김수환) 입법에 동참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이는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 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

해 4월 20일 ‘김수환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꿈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고 적었다.

한편 최고위는 지난 2020년 재선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무소속)의 복당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복당까지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2석 늘어나게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채은지 시의원 ‘성평등 일자리 기반 구축’ 토론회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민중·비례)은 26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와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및 노동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김영신 광주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주제 발제를 하고,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류만숙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장, 임영희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채 의원은 “성평등 일자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추진 중이며,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역 성평등 일자리 정책의 나아갈 방향과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싼
지분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문의. 010-3605-5000